

박순애 '논문 중복게재' 이익 없어 문제 없다?

교육부 유관기관 공식 해설서 내용과 '상충'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중복게재'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아 문제될 일이 아니라고 해명한 가운데, 정작 교육부 유관기관의 공식 해설서에는 이와 상충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윤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연구부정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는 한편 필요시 조사에도 나서고 있다. 연구재단에 따르면 이 해설서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지난 2015년 개정되면서 발간한 해당 훈령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이다. '부당한 중복게재'에



박순애 장관 후보자

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경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권인숙 의원은 박 후보자가 과거 발표했던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다른 학술지에 거의 그대로 게재해 중복게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복게재가 이뤄진 학술지들은 그 당시 '보내는 글은 이전에 발표했던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등의 자체 윤리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물론 부당이익을 취하지 않은 중복게재가 명확한 연구윤리 위반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진도 해설서 상에서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연구진은 "중복게재에 대해 많은 이견이 있는 만큼 개정 지침(훈령)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소한의 내용(부당한 중복게재)만을 명시한다"며 "(다른 중복게재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합리적인 결정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다만 연구진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출판 윤리에서 연구자 자신의 이전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새 연구에 활용할 때에는 정확한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 훈령상 '부당한 중복게재'만을 명시했다고 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고 부당이익을 보지 않은 경우가 허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경우인지를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처럼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논문 중복게재' 의혹에 대해서는 다름의 여지가 열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계에서는 박 후보자가 협소한 영역인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해서만 해명을 내놓을 일이 아니라 중복게재에 대한 의혹 제기엔 성실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명을 요구한 한 연구윤리 전문가가 "부당한 중복게재는 중복게재 중에서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연구윤리를 심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박 후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는 아니지만, 중복게재라는 의혹 제기엔 대한 명확한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재단 해설서에 대해 "중복게재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견해와 논의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윤리를 수렴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연구윤리 관련 훈령해설서 살펴보니 "사안에 따라 용인되는 일인지 판단해 봐야" '부당한 중복게재', '중복게재' 중 엄중한 일부 교육부 "학계 다양한 논의과정 설명한 것"

지 여부만으로는 연구윤리 문제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교육계에선 '문제될 일'은 박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5일 뉴스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를 살펴본 결과, 박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학문 분야 등에 따라 연구윤리를 어진 '중복게재'에 해당할 수 있어 검증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해설서는 2015년 11월 발표됐다.

교육부 유관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국가 연구개발(R&D) 관련 전문 관리 기관으로, 2020년 7월 산하에

대한 규정이 처음 만들어진 직후 나온 해설서다.

앞서 박 후보자는 해당 교육부 훈령을 인용해 "논문들을 통해 중복해 연구비를 수령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적이 없으므로 현재 기준으로도 '부당한 중복게재'라 보기 어렵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연구재단 해설서는 훈령상의 '부당한 중복게재'가 학문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구윤리 위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중복게재' 가운데 가장 엄중한 행위에 해당하는 일부 영역이라고 설명한다.

해설서를 집필한 연구진은 다양한

중복게재 유형에 대한 설문조사, 공청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중복게재'를 3가지 유형으로 정의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발표·게재된 자신의 저작물에서 중요한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는 경우', '연구의 독자성을 해할 정도로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내머지 하나가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자신의 이전 저작물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여

당정 "법인세·유류세 인하 등 수단 총동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세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진행한 후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정은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 체질이 취약하다. 정부 주도의 과감한 시장 개방과 세급·일자리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탄력이 저하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안 되는, 연구윤리를 심하게 위반하는 행위"라며 "박 후보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는 아니지만, 중복게재라는 의혹 제기엔 대한 명확한 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재단 해설서에 대해 "중복게재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견해와 논의의 과정을 설명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윤리를 수렴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또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적 위기에 처할수록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은 더 큰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노인빈곤 완화와 청년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공공자에 지급하는 생활보조금 확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상향 등 정부가 강구할 방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尹정권, 경제 손 놓은 채 文 보복수사"

민중, 백운규 영장 · 박상혁 수사에 '檢 보복수사 개시' 맹폭
물가 폭등 · 주가 폭락 · 물류 대란 등 '경제 3종교' 대응도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자당 박상혁 의원 수사에 들어간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보복'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아울러 법무부 주도의 '인사검증'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움직임에 비판하고 최근 경제위기 대응을 질타하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퍼붓는 모습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의 박 의원 소환조사 보도와 관련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며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그 첫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고 비판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치보복 수사를 시작했지만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하고

자 한다. 즉각 중단할지 바란다"면서 당내 대응기구 수립을 통한 대응을 벌였다.

아울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대비대법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선 "법무부 장관과 현직 검사가 판사의 인사검증을 한다고 하니 정말 웃긴 현실 아니냐. 무슨 이런 나라가 있다"며 "한동훈을 통해 전(前) 정부 보복수사를 하고 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박재호 비대위원도 "행안부의 경찰장악 시도에 경악한다"며 "군사독재 시절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다를 없다. 정부가 경찰을 통치 통제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거들었다.

김현정 비대위원 역시 "경찰의 독립과 함께 민주주의를 이룬 대한민국 역사를 퇴행시키려 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시급히 행여야 할 것은 권력 장악이 아니라 민생과 국민의 생활 안전 보장을 최

사하기 바란다"고 했다.

물가 폭등 등 '경제 3종교'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다. 박용근 원내대표는 "가까스로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국가 전체가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물가폭등, 주가 폭락, 물류 대란 등 경제와 민생 고통에는 손 놓고 있으면서, 권력기관 장악에만 전광석화처럼 기만하게 밀어붙이는 정부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우 비대위원도 "이러한 비상 경제 상황에서 정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감면 지원조치를 얘기하는데 리터당 50원 정도다. 그걸로 민생이 해결될까. 특단의 조치를 위해 여야에 관계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난이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 취임 한 달 동안 민생과 경제 위기에 대응한 명쾌한 대안과 진정성 있는 행보를 찾을 수 없다"며 "경호원에 둘러싸여 시장과 국장을 누비는 이미지 정치가 중단하고, 국민이 시장과 극장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 중심의 국정 운영을 펼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뉴시스

"전북 발전 여·야 따로 없다"

도시사직 인수위 도정혁신단, 정운천 의원 초청 특강

"전북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전북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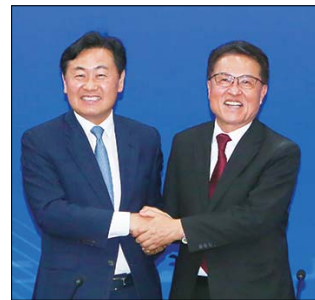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회 도정혁신단(단장 두재균)이 15일 인수위원회 중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초청해 '전북도정혁신' 특강을 마련했다.

도정혁신단이 마련한 이번 특강은 김관영 당선인과 인수위 각 분과, TF 단장 및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운천 의원으로부터 '민선 8기 달라진 도민체감형 전북도정혁신과제'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이날 정운천 의원은 "두재균 단장이 초청했을 때 민관이 교차 됐다. 인수위에서 첫 번째 연사로 저를 불러준 것 만해도 영광이다"면서 "저를 부른 것만으로도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정을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혁신과 예산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전체 직원의 10%를 빼내고, 그 빼낸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면서 "그러면



90%의 직원들도 긴장해 가장 낙후된 도민 행정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도 10%만 줄여도 전북도정을 이끌어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이 돈은 도정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 "정운천 의원의 전부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본받고 싶다. 도정의 20개 세부 실천과제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긴밀히 협조해 더 큰 전북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신성장 분과 업무보고

남원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김주완) 신성장 분과는 지난 14일 최경식 당선인 주재 하에 4개 관계부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최경식 당선인이 직접 신성장 분야 공약 구상요지를 설명하고 기업지원과, 농촌활력과, 축산과, 기획실 등 4개 부서의 일반현황과 주요업무를 청취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민선 8기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방향과 이행방안을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주 내용은 △미래 신성장산업,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항공안전기술원 분야 유체 △농생명 바이오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논의였다. /남원=김기우 기자



한편 최경식 당선인은 인수위에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방안을 꼼꼼히 검토해 속히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여러 부서가 연계되어 있는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우 기자

최영일 순창군수

인수위 업무 본격

현안 등 업무보고 청취

민선8기 순창군수직 인수위원회가 15일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인수위 업무를 본격 시작했다



순창군 행복누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업무보고는 최영일 당선인과 인수위원, 자문위원과 신병기 부군수를 비롯한 국장, 실과원장, 각 과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이날 기획예산실, 행정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를 시작으로 △16일 경제산업과, 보건의료원 신하 8개 부서 △17일 4개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 순서로 진행될 계획이다.

보고는 각 부서별 주요 사업의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공약사업 검토 결과에 대한 설명과 인수위원들의 질의 및 답변으로 진행된다.

최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인수위 활동은 향후 4년간 군정의 운영 방향과 정책기조 마련 등 전방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업무"라며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이라는 비전 아래 △군민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돈 버는 농업 △따뜻한 복지 △정주인구 증대라는 민선 8기 순창군정 5대 목표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민선 8기 공약 실행계획, 시급히 해결하거나 준비할 과제, 중요 민원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서장 등 공무원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지영 인수위원장은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수위원회가 군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된 민선 8기 핵심과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민 기자